

“中 수출 부진·글로벌 인플레이션 韓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응”

산업부, 하반기 수출 진출전략 설명회
KOTRA,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 제시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시스

정부가 하반기 수출환경이 쉽지 않다고 보고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페이토 강남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하반기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KOTRA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첨단산업 제조 선진국으로 중국은 다각화된 소비시장으로 중동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미래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소개됐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시장변화 상황에서 수출 기회로 연계될 수 있는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우대 △주요 시장별 유망 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대 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 내 숙박시설 중 하나인 하우스형-카라반(20~35㎡)의 모습.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에 ‘탄소중립형 야영장’ 4호 등장

국립공원공, 사기막 야영장 21일 개장

국립공원공단이 3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경기 고양 덕양구 사기막골) 야영장을 오는 9월2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야영장 출입이 가능하다.

국내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운영 중인 월악산과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북한산이 4호를 기록하게 됐다.

공단 측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차량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 등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오가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야영장에서는 일회용품발생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한다.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회용기는 2인세트 대여가 5500원, 4인세트가 9900원이다.

사기막 야영장은 부지면적 3만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 시설 43동 △코인사위장 1개동 △개수대 3동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조선업 현장애로 해소 적극 나서

현재 총 28건 접수해 20건 해소
지자체 협력·박람회 개최 등



/유도이미지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 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

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포,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

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늘어

내년 예산 43억·대상자 3만명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기업·투자자 정보교류 활성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ASSIST
민간자본 농식품 산업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ASSIST는 ‘사업설명(IR)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검증 재무정보’, ‘투자유치 희망액’, ‘투자 선호·발굴 희망 분야’ 등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

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산업부, 국표원 안전기준 개정고시
KC 평균 시험비용 10% 절감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 시험’ 폐지다. 압입량 시험은 건

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

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해 업계 부담이 완화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